

여성정책동향

- 국내여성정책동향(2010년 4/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 2010 연구과제 소개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Ⅱ):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 2010 연구보고서 목록

- KWDI 동정 (2010. 10 - 12)

국내여성정책동향(2010년 4/4분기)

문 희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2010년을 마무리하는 4분기는 북한이탈, 평화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의제들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요청된 중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4분기의 여성정책동향을 되짚어본다.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 시급

남한사회에 있는 새터민 2만여명 중 7~80%가 여성으로 추산된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남성에 비해 북한 내에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중국에 나와서도 가사 도우미 등 생계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라는 이름에 가려 여성으로 당하는 인권차별·폭력·빈곤 등 이중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하고, 정책적 대안은 수립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여성 가운데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성경험 여부를 조사받았다는 답변이 80%에 이른다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설문결과(새터민 222명 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여성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여성가족부가 북한이탈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회성 강의에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여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약 41%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취·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맞춤 훈련을 실시하고,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한 고용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문직 재교육, 교육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여성탈북주민을 지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한국여성운동단체 대표들, 북한학 전공자들이 ‘북한이탈여성 지원과 연대’를 결성했다. 이들의 목적은 탈북여성이 겪는 차별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지원’과 남북여성이 서로의 사회·문화를 공유하며 남북 사회통합의 한축을 만들기 위한 ‘연대’를 이루는데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북한이탈여성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남북 평화협상 과정에서의 여성 역할 강화 필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가 채택된 지 10년이 지났다. 결의안 1325호는 여성의 분쟁 경험을 국제 평화와 안보 의제로 채택하여 분쟁해결 및 평화협상, 분쟁 후 평화구축 및 통치 등 전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여성들의 전면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틀이다. 결의안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 참여, 성범죄로부터 여성 보호, 여성 인권 증진, 평화유지 활동에의 성 주류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평화구축 과정에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관심사는 평화조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여성개발기금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있었던 20개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협상팀 구성원 중 여성의 비율은 8%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후 복구 계획에서 여성들을 위한 조항 및 예산 편성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평화협상 과정에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이 오랫동안 실천해 온 반차별 및 반폭력 운동이 평화적 가치 추구의 방법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평도 사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시기에 평화체제 실현과 통일과정에서 여성이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관점의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활발

한국이 2011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성 평등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정된 것에 때맞춰 여성가족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는 성인지적 관점으로 개발협력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한창이다. 그동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농어촌 개발, 정보통신기술 등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크로스 커팅(cross-cutting) 이슈인 젠더를 개발협력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원조의 효율적 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개발도상국 내 남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통한 여성 지위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e-Biz, IT 교육과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도상국 여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시행중에 있다.

KOICA는 ODA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개발도상국 여성의 권익향상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적극 발굴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에서도 여성 쿼터제(30%)를 엄격히 시행하며 신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나간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듯이 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성 인지 관점이 개입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MDGs 달성과 경제, 식량, 환경문제와 맞물려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여성들의 생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총체적인 원조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와 관련 부처, 정책연구소, NGO 등이 UN-Women과의 협력을 통해 ODA 사업의 성인지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10년 한국사회의 성 평등 지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0년도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우리나라는 0.634로 조사대상국 134개국 가운데 104위에 그쳤다. ‘성 격차 지수(GGI)’는 경제참여도(노동력인구 비율, 동일노동대비 임금비율, 전문인력 비율 등), 교육성취도, 보건수준, 정치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성 격차 정도를 산출한다.

또한 유엔개발기금(UNDP)에서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우리나라는 0.310로 138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성불평등지수(GII)’는 유엔개발기금(UNDP)이 2010년부터 각국의 성불평등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도입한 지수로,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것이다. 기존의 남녀평등지수(GDI)와 여성권한척도(GEM)의 지표가 선진국·엘리트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등 지표 선택의 적절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성불평등지수(GII)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성불평등지수(GII)는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률, 여성의원 비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성불평등을 측정한다. 지수가 0으로 갈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GII)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모성사망률이 14%, 청소년 출산율이 5.5%, 여성의원 비율 13.7%, 25세 이상 인구 중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여성의 인구는 79.4%(남성 91.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남성 75.6%)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EF), 유엔개발기금(UNDP)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되는 성평등지수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는 건강,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 영역에서는 성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정치, 경제 등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성 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 평등 점수(완전한 성 평등 상태를 100으로 가정)는 61.2이다. 이번 연구는 성차별의 근원을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8개 사회부문별(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차별의 원인, 성 평등 수준과 개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성 평등정책 전략을 체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향후 매년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 부문 성 평등 점수는 89.3점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정보 부문(74.3점), 교육·직업훈련 부문(70.3점), 경제활동 부문(66.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사결정 부문의 성 평등 점수는 23.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성 평등 관련 각종 국제지수에 대표성 분야의 우리나라 순위가 특히 낮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향후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이 시급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향후 국가 성평등정책의 방향이 의사결정직, 안전, 가족 부문 등 남녀불평등이 심한 부문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이며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둘러싼 논쟁 가열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0에 근접하며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10월 2011년부터 향후 5년동안 추진할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확정했다.

최종안을 보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하면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시안에 포함됐던 대책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전환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 3당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다며 비정규직 여성들의 노동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53.5%로 상당히 높다. 이들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보다는 시설에 영아를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제2차 기본계획의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등 민간보육시장 육성책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지금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금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원받지만, 정률제로 바뀌면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 안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받게 돼 임금 수준에 따라 한 달에 최대 50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비판의 핵심이다.

저출산 문제를 성장위주의 담론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을 버리고,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재산권, 여성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대한 섬세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보육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가 아니라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방안,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조손가정 지원대책 서둘러야

65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18세 이하의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3만 5,000여 가구이던 조손가구가 올해는 6만 9,000여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2월 전국 조손가족 5만 1천 852가구 중 1만 2천 7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82.9%에 달하는 대부분의 가구가 조모 혼자 또는 조부 혼자서 손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조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0만원이 채 안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도 전체의 3분의 2나

됐다. 조부모들의 평균나이는 72.6세의 고령에다 10명 중 7명은 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부모들이 자력으로 소득을 늘리기는커녕 아이들을 충분히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 준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만한 형편이거나 의향이 있는 경우도 7%에 그쳐 조부모들이 아이 양육을 위해 경제적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손가정의 중·고교생 아이들의 경우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취업 등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고 소득이 적은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우려를 높인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희망사항으로 가족의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조부모의 질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대부분의 조손가정이 심각한 빈곤 상황에 놓여있으나, 국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조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2011년에 4개 시·도에 조부모의 가사·건강 도우미, 아이의 학습 도우미 파견 등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억원이 깎여 고작 4억원이 전부이다. 이에 정부는 조손가구에 대한 예산안 확충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

8개 지자체, 여성친화도시로 추가 지정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 ‘2010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을 개최하여 서울 강남구, 수원시, 시흥시, 강릉시, 청주시, 당진군, 대구 중구, 달서구 등 8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하고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의 보다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2009년 익산, 여주시 2개 도시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2010년 8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약식을 체결하는 8개 여성친화도시들은 앞으로 5년간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기본과제, 심화과제를 추진하게 되며, 동시에 지역특화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여성친화적이면서도 특성을 살린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추구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의 지역정책의 제반(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친화도시의 비전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성인지 교육, 컨설팅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향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지원 체계 수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I)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 영문제목 : Research on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Gender Mainstreaming System(III)
: The Results and Future Tasks of Gender Impact Assessment
- 연구책임자 : 김경희
- 공동연구자 : 양애경, 문유경, 김돌순, 송치선, 남궁윤영

성 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 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 주류화의 핵심도구로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5년간 중앙기관과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었고 참여기관 및 과제 수가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또한 분석대상 과제의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일반 정책에 성 인지적인 관점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이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를 위한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간 시행되어 왔던 성별영향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내용분석, 해외전문가 면담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FGI, 등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는 인프라구축의 측면, 수행의 측면, 성과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먼저,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 등의 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성 평등한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의 여성정책조정기구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도개선 및 정책환류를 점검하고 공무원 교육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 수행의 측면에서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의 양식 개선,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중앙기관의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시키고 인센티브의 확대, 성인지 감사(gender audit)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가 정부 주도형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거버넌스가 실천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일반주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단위에서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Regional Practice Network: RGPN)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지역 연구기관(성별영향평가센터)이 주축이 되어 여성정책 전문가, 여성부서 공무원, 의원, NGO활동가, 언론인 등의 정책 환류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I) :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Public survey on the practices of gender equality and the barrier factors
: Focusing activities in the workplace
- 연구책임자 : 안상수
- 공동연구자 : 박성정, 김금미

이 연구는 직장내 공식 비공식 활동에서의 성평등 실천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또는 장애요인들을 검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해 이루어진 가사활동에서의 성평등 실천을 검토한 연구에 이은 2차년도 과제로서 직장내 다양한 영역이나 세부 상황별로 나타나는 활동들에서 나타나는 성별분리 현상과 성평등 실천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조직 관련 변수들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평등의식, 조직문화의 성평등 정도, 퇴근문화, 직장내 목표지위와 승진가능성 기대, 일-가정 양립의 정도, 가사활동참여 정도, 가족친화제도 활용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이들 요인들에 의해 직장내 성평등 실천이 어떻게 예언되어지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직장내 성평등 실천의 증진 및 저해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성평등의식이 실천으로 전이되어지는 심리·사회적 경로모형을 검토하였으며, 직장에서의 성평등 관련 요인들이 가사활동참여로 연계되어지는지 그리고 이들 요인이 조직효율성 요인인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5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표집을 통해 19-70세 연령범위의 남녀 직장인 3,027명(남성 1,507, 여성 1,52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8개 집단(5-6명 단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업종, 직급, 직장규모, 기업유형(공기업, 일반기업) 등의 직장 관련 변수와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성별분리와 성평등 실천 정도에 다양한 변인들이 발견되었다. 핵심업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주로 남성이 담당하였고, 중요도가 낮고 보조적인 업무는 여성이 담당하는 성별분리 현상이 일관성 있게 나타났으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진 직장일수록, 명확한 성평등 지침이 있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성별분리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분배, 신입사원 채용, 승진/보상/평가, 교육/능력개발, 해고/퇴직 등의 구체적 상황별로 검토된 성평등 실천 정도는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직장인일수록, 정시 퇴근이 보장되는 문화나 성평등한 조직문화일수록, 여성비율이 높은 조직일수록 높았다. 반면에 연령이 많을수록, 경력포부수준이 높을수록 성평등 실천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직장 남성들은 외벌이 직장 남성들에 비해 높은 가사활동 참여를 보였지만, 양육/교육영역의 가사활동 참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성 직장인들은 직급이 높아도 여전히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 직장인들은 초과근무가 많을수록 특히 양육/교육영역의 가사노동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용이성이 높아도 가사활동 참여를 유의하게 예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가 가정영역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평등意識이 성평등 실천으로 연계되어지는 과정에 관한 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평등意識이 실천으로 전이되는 데는 '성별지위의 합법성 지각', '주관적 규범 지각', '행위에 대한 통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성평등 관련 변수와 조직 효율성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정시퇴근문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가족친화제도 활용용이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평등 실천 정도가 높은 남성 직장인들에게서도 이러한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내 성평등 실천을 증가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직장 내 인사관행 개선과 성평등 지침 마련, 노조 참여, CEO의 의식개선, 성별 다양성 제고 등을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야 하고, 직장인들로 하여금 장시간 근무를 유발시키는 제반 환경을 개선하여 정시퇴근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문화,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직장인 대상으로 주관적 규범지각이나 성별 지위의 합법성을 약화시키고, 직장내 성평등 실천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강화하거나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정생활 영역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갈등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육과 양육의 어려움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이 종합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달라지는 남성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가 가진 목적과 의미를 보다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 연구보고서 목록

• 경제위기에 따른 여성고용변화와 향후과제	김태홍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민무숙
• 여성 박사인력의 교육-고용 불일치 실태와 과제 : 녹색성장관련 전공과 기타 전공간 비교	신선미
• 취업부모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홍승아
•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 비혼여성의 일·가족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김혜영
•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이수연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사업의 편익추정 : CVM을 이용한 실증분석	조선주
•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 인지적 전략	이선주
• 여성 장애인 지표개발 연구	전기택
•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방안 연구	김원홍
• 2010년 한국의 성 인지 통계	주재선
•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윤덕경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I) : 녹색성장과 여성인력양성방안	김태홍
•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IV) :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오은진
•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IV): 성인지 예산 제도 모니터링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김영옥
- (외부위탁과제 1)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대한 성인지 분석 (위탁기관: 대구가톨릭대학교)	김안나
- (내부위탁과제 1) 우울증 검진 확대방안: 성인지적 분석 및 소요예산 중심으로	김영택
- (내부위탁과제 2)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사업 예산의 젠더분석	정해숙
- (내부위탁과제 3)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신선미
- (외부위탁과제 2) 돌봄 공유를 위한 성인지적 공공주택정책 방향: 보금자리 주택 관련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위탁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미선
- (내부위탁과제 4)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 여성 경제활동	이택면
- (외부위탁과제 3) 무급 돌봄 노동 공공화를 위한 재정 비용 연구(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윤자영
- (내부위탁과제 5) 가족에 의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치 추정	김영옥
- (외부위탁과제 4)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재진출 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세제개선방안(위탁기관: 한국세법학회)	이상신
- (외부위탁과제 5)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연구	주소현
• 성 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Ⅲ) :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김경희
- (세부과제 1)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위탁기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 (세부과제 2) 대전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위탁기관: 대전발전연구원)	주혜진
- (세부과제 3) 경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위탁기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형옥

- (세부과제 4) 전남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위탁기관: 전남여성플라자) 오미란
 - (세부과제 5) 제주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위탁기관: 제주발전연구원) 정영태
-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방안(Ⅱ) :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 이미정
-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Ⅱ) :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안상수
-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이택면
- <협동>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김이선
- (세부과제 1)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 자원사용 및 세대간 전수에 관한 연구 김이선
 - (세부과제 2)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연구(위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이재분
 - (세부과제 3)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양인숙
 - (세부과제 4)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 언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위탁기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고혜원
- <협동>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변화순
- (세부과제 1)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가족·문화 부문 변화순
 - (세부과제 2)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미국의 가족·청소년 부문(위탁기관: 미국 EWC, East-West Center) 최민자
 - (세부과제 3)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건강부문 김영택
 - (세부과제 4)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노동부문 (위탁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 (세부과제 5)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복지부문 (위탁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 삶의 질 전략단 운영 양애경
-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에 관한 연구 이택면
- 여성친화적 문화시설 조성방안 연구: 공연시설내 보육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이수연
- 가족문제 예방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측정 연구 조선주
- 2010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김원홍
- 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정책 개선방안 이미정
- 북경행동강령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이선주
-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 여성분야 김원홍
- 베이비붐 세대의 남녀특성 비교 연구 김영란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발굴 연구 장혜경

KWDI 동정 (2010. 10 - 12)

■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통합(2010. 10. 11)



패널토의자로 김이선(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민무숙(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설동훈(전북대), 정승희(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등 참석

■ 글로벌 여성 포럼(2010. 10. 22)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후변화의 젠더적 영향을 평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도모할 평등전략과 여성 리더십의 과제를 논의 함. Lorena Aguilar Revelocucn, 명수정(환경 정책 평가연구원), Richard King(Oxfam GB), Mayra Buvinic(World Bank), 이선주(한국여성정책 연구원), Eva Rathgeber (Ottawa uni)등 발표

■ 국가 재정과 성인지 예산(2010. 11. 15)



성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제고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함. 김규욱(기획재정부), 박인화(국회예산정책처), 이재인(여성가족부),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 등 발표자료 참여.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및 아버지 역할 지원 방안 대토론회(2010. 11. 15)



권오진(동작구 가족자원센터), 김규식(여성가족부차관), 김관중(한국경총), 김순희(노총), 문은영(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신예리(중앙일보), 최영훈(미래기획위원회), 등 토론

■ 아동 성폭력 예방 국제 컨퍼런스(2010. 11. 18)



David L. Corwim(유타주립대), Patricia Lp(홍콩 United Christian Hospital), 박지선(경찰대), 이현혜(양성평등진흥원), 이미정(한국여성정책 연구원), Keith L. Kaufman(포들랜드주립대), Steve Herman(하와이주립대)등 주제 발표.

■ 양성행복 정책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2010. 12. 2)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 왼쪽 김태현 원장, 오른쪽 원윤희 조세연구원 원장, 문숙경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 등 참석. 김근세(성대), 송인자(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단 전문위원), 김경희(여성정책연구원), 홍미영(부산여성가족개발원)주제를 발표.